광주 원룸 경보기·소화기 없는 곳 수두룩

우후죽순 건립 속 기초소방시설도 제대로 안갖춰
4층 이하는 소방점검 대상 제외…불나면 대형사고

광주지역 상당수 원룸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4층이하 '원룸'은 화재 위험에도 불구,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적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화·피난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소방본부의 점검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소방특별 전수조사를 벌여 2만6096개소를 점검했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단독주택인 원룸건축물은 단 한 차례 점검도 받지 않았다.

1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 1010건으로 이중 100건(9.9%)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106건(112건·10.13%) ▲2013년 1110건(138건·12.43%) 등 원룸과 같은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빈번하지만 이들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원룸의 경우 건축물 용도상 다가구주택으로, 개인이 거주하는 일반주택과 달리 입주자들이 많고 건물 구조가 복도형식인 곳이 대부분이다. 비상구도 통로로 쓰이는 계단이 전부인데다, 최근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창까지 설치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광주시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세대별·층별·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데다, 비용 문제 등을 내세워 건물 소유주들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4층 이하(연면적 400㎡ 이하)로 원룸을 건축할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업주들도 있는가 하면, 의무 설치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럼에도 다가구주택(원룸) 건축허가는 ▲2011년 980건 ▲2012년 896건 ▲2013년 836건 ▲2014년 567건으로 수완지구·선운지구 등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려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비좁은 부지를 활용하는 건물주들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가 50㎝도 채 떨어지지 않아 자칫 대형 화재의 우려가 높은가 하면, 충분한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지어진 경우도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힘든 사례도 많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광주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일반주택도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에 관한 강제규정은 없어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신축 건물은 허가 당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개정 이전 건물들은 원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설치 홍보를 벌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점퍼 하나 때문에…

아들 점퍼 가져간 초등생 감금 30대 법정구속

아들의 점퍼를 가져갔다며 등교중인 초등학생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30여분 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어린 학생이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반성은 커녕, 정당하다는 주장만 펼치며 피해 회복 조치도 없어 사회에서 격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등교하는 초등학생(10)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5분께 화순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는 B군에게 자신의 아이 점퍼를 가져갔냐고 추궁하면서 승용차에 태우고 30분 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B군은 지난 12월 20일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리던 A씨 자녀의 노스페이스 점퍼(34만원 상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었다. B군은 이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B군 담임교사와 상의하는 등 잃어버린 옷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합리적 방법이 있음에도, 10살짜리 아이를 급우들 앞에서 강제로 태워 감금한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건 바난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회복해주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등 A씨는 납득이 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를 무고, 명예훼손, 절도 등으로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의정부 아파트 불…4명 사망·120여명 부상

주말 아침 경기도 의정부시내 원룸 건물 3동에 화마가 덮쳐 128명이 사상했다.

평화롭던 토요일 오전 늦잠을 자고 여유를 부리던 주민들이 난데없는 화재로 아비규환 속에서 숨지거나 부상에 신음했다.

화마를 피하고 겨우 살아남은 주민들도 모든 것을 잃고 한겨울 추위에 임시대피소에서 초점 잃은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올해 첫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부상자 중 11명 아직 위독**=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나 한경진(26·여)씨 등 4명이 숨졌다.

또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2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해 의정부와 서울지역 병원 15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명은 중상으로 위독한 상태이며 46명은 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귀가했다.

불은 옆 건물로 확산해 10층과 15층짜리 건물 등 3개 동을 태웠다. 인근 또 다른 4층짜리 건물과 주차타워,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2곳도 피해를 봤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20대도 모두 탔다. 불은 발생 2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진화됐다.

◇**수사본부 편성…실화 가능성 염두**=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 11일 의정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인력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원인력 등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CCTV를 확인해 1층 우편함 앞에 주차된 4륜 오토바이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영상에는 오토바이나 주변에 불을 붙이는 장면은 없어 일단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배선과 과열 등 화재 직전 상태와 용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처참한 화재현장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불에 탄 건물 외벽과 골조가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인해 4명이 숨졌고 1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교직원 2명이 학교서 男초등생 성추행

전동 드릴로 위협도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이 어린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경찰이 관련 내용을 통보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 근무토록 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직원 A(56)씨 등 2명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시설 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맡는 직원으로 지난해 11월 초순 복도에서 만난 남학생(8)을 인근 시설 사무실로 데려가 "남자인지 확인해보자"며 수 차례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남학생이 싫다고 발버둥치며 울먹이자 "울지 말라"며 전동드릴을 보여주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키로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자처럼 생각해 귀여워서 벌인 행동으로, 드릴로 위협한 것은 장난"이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과 광주시교육청은 특히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교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뒤늦게 해당 교직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해 피해학생과 접촉을 막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신때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 교수들 국가상대 손배소

유신체제 당시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됐던 교수들이 국가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교단을 떠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홍길(73) 전 전남대 교수와 고(故) 명노근 교수 부인 안성례(여·77)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7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는 것이다.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 1978년 6월 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석연·이방기·이홍길·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유신 체제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며 저항한 사건이다.

당시 참여했던 교수 11명은 모두 해직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 송기숙 교수와 연세대 고 성내운 교수가 구속됐었다.

이 교수와 명 교수 유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0대 여성, 담배 판매 제한에 40여분간 마트서 행패

쌍나팔

○…마트에서 담배를 더 못 사게 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행.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20)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W마트에서 주인 김모(75)씨에게 담배 세 갑을 요구했으나 "담뱃값도 올랐는데 조금만 사라"는 말에 격분, 계산대에 진열된 사탕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내뱉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는 것.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평소 피우던 수입 담배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인이 권유하는 국산 담배를 골랐는데 사고 싶은 만큼 담배를 못 사게 해 술김에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융 3억8천만원, 보 1억5천만원에 월 250만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빌라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파크 빌라 304호, 34평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가, 내부 깨끗함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다음 빌리지 301호, 32평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5500만원

문의 H. 010-3605-5000

전남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전원 주택지

■ 광덕 교차로에서 3분거리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 H. 010-3605-5000